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 승리하라

정당방위 조직이 필요하다

관련 기사 10,11면



대선 전초전
4월 재보선에서
우파가 회복할
것인가?

3~5면

미얀마
대중 파업이
군부를
뒤흔들 수 있다

10, 11면

미국 사회주의자 초청
토론
바이든, 트럼프보다
얼마나 나올까

6~8면

램지어의
'위안부' 망언,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2면

택배 과로사 대책 합의 한 달
인력 충원은
생색내기 수준,
해고 자행하는 택배사들

12면

서평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9면

서울시장 선거
성소수자 쟁점화
기회주의 박영선,
혐오 조장 나경원·안철수

11면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김승주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램지어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온 일본법 연구자인데,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 공로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미쓰비시는 하버드대학교에 큰 돈을 후원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학교 총장도 램지어 논문을 “학문의 자유”라며 옹호하고 있다.

램지어 측은 이 논문이 게임 이론 등을 적용해 법경제학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접근했다고 하는데, 검토한 이들은 일본 우익들의 오래된 역사 왜곡을 끌어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램지어의 주장을 요약하면, 위안소 생활이 ‘고위험’이었던 만큼 ‘고수입’이 보장됐으며, 대부분의 위안부는 “예비 매춘부”로서 매춘업자와 “상호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자유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램지어는 이런 뻔뻔한 주장을 펴면서 실제 계약서 증거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램지어의 논문을 검토한 하버드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들은 “학문적 진실성을 해치는 지독히 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고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일부분(‘돈을 벌어 저축했다’)만 취사선택하고 자신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일본군 헌병에 의해 끌려갔다’ 등)은 배제하고 인용했다.

램지어는 위안부 역사 왜곡으로 악명 높은 하타 이쿠히코가 1999년 출판한 《위안부와 전장의 성》 등 일본 우익들의 기존 출판물과 익명의 우익 블로그들을 주로 참조·인용했다.

강제 동원된 수십만 명의 식민지 여성들과, 침략 전쟁을 수행하며 식민지를 강압하던 일본 제국의 관계를 합리적 거래 관계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진실에는 아무 관심도 없음을 알



“이제 시간이 없다” 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눈을 짓는 이용수 할머니. 2주 전고 정복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생존 피해자는 15명이다

수 있다.

이처럼 세계적 명문 대학교의 교수라는 자가 증거도 없이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저질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정식으로 실을 수 있다는 사실은,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배상 판결 회피하는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법적 배상을 통한 공식 사죄를 요구해 왔다. 법적 배상 과정을 통해, 일본 정부를 재판정에 세워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지난 1월 8일 한국 법원은 일본 정부에게 고 배준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50일 가까이 흐른 지금, 배상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조차 피해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배상 강제집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후 정부는 일본 측과 물밑 접촉해 배상 판결을 우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른바 대위 변제)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측이 구상권 청구에 순순히 응할 리가 만무하고,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을 바라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전혀 충족시킬 수 없는 안이다.

결국 논란이 생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당사자들이 납득해야 [하드로] ...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달렸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법원의 배상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 해매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고 정복수 할머니가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제 남은 피해 생존자는 15명뿐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갑갑한 상황 때문에, 2월 16일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한 ‘일본군위안부문제국제사법재판소회추진위원회’의 신희석 박사(국제법)는 ICJ 재판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막다른 길에 가로막힌 듯한 처지에서 ICJ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 보는 피해자의 심정은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적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위안부 단체들이 1990년대부터 일찍이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구에 개입해서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보고서와 결의문을 이끌어 냈지만 끝내 이행되지 못했던 과거 경험도 있다.

ICJ 재판은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고, 판결이 나더라도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서 한국 측이 승소하더라도 일본은 이를 무시할 수 있다. 일본은 2014년에도 남극해 고래잡이 문제로 호주에 의해 ICJ에 피소됐지만 고래잡이를 중단하라는 판결에 불응한 바 있다.

무엇보다 ICJ와 그것을 관장하는 유엔이 단지 법리나 인도적 판단에 의해

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 이 기구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강대국들(미국의 주요 동맹인 일본도 그 일부이다)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고, 제국주의 질서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다.

예컨대 예방 전쟁(적의 공격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벌이는 선제적 전쟁)은 불법 침략 전쟁이라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는 이후 미국이 벌인 이라크 전쟁에서 정면으로 무시됐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명분으로 침략 전쟁을 벌였지만 이후에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보다 훨씬 핵심적인 기구인 유엔 안보리마저 무시하고 전쟁을 강행했었다.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안소를 설치해서 운영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놨고, 같은 해 ILO(국제노동기구)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이 ILO 29호 조약(강제노동 금지규약)을 위반했으므로 적절한 피해 배상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모두 무시했다.

위안부 문제는 단지 국제법이 규정하는 추상적인 인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 다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과거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이유는 그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오늘날의 군사대국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필요한 아시아의 두 동맹국(일본과 한국)이 과거사 문제로 틀어져 긴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개입해 왔다. 미국의 “중재”는 결국에는 더 중요한 동맹인 일본보다는 한국에 자체·양보 압력을 넣는 것으로 이어지곤 했다.

따라서 제국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강조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국제 기구 설득하기에 몰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 동맹을 우선해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배상 판결 이행, ICJ 제소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시간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김승주 외 지음, 노동자연대, 128쪽, 4,000원

문재인 정부는 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면할까?
일본 국가와 우익의 역사 왜곡은 왜 계속될까?
위안부 문제는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집권 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문재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곤혹스럽다면서 강제집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문제 해결보다 한일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반일 제스처와 타협적인 대일관계를 왔다 갔다 하는 행보는 본질적으로 역대 한국 정부에서 계속 반복돼 온 패턴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일본 국가와 우익들의 망언은 지속돼 왔다.

위안부 문제는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이 소책자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전후, 냉전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질서의 변천 속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가 왜 계속 해결되지 못했는지를 분석한다. 이때 일본과 한국의 지배계급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적 동맹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며 성장해 왔음을 지적한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운동 내 쟁점도 다룬다. 특히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된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을 돌아보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짚어 본다.

위안부 문제가 무엇이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소책자다.

대선 전초전 4월 재보선에서 우파가 회복할 것인가?

김문성

4월 7일 재·보선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초에 치러질 예정이므로 올해 하반기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를 반년쯤 앞두고 한국의 제1, 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것이다. 두 도시를 합하면 전국 유권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서울시장은 한국에서 선출직으로는 대통령 다음인 '넘버2'이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다. 부산은 한국의 제2도시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고향이자 핵심 기반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이다.

두 곳 다 민주당 소속이던 전임 시장의 성추문 문제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두 곳의 선거 결과는 상징성이 강해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가능자가 될 것이고, 역으로 그 결과가 대선 정국과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여름 이후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통치 누수 현상도 슬슬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10~15퍼센트 높다.

따라서 이번 재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이자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띤다. 주류 정당들이 사활을 거는 까닭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경제 부처나 검찰 등의 보수적 정부 관료들이나 기업인들의 공격과 압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과 진보·좌파가 무리한 요구를 해 정부를 곤란하게 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제해 온 편이라는 것이 두루 알려져 있다.)

문재인은 집권 초 이런저런 개혁 약속을 했지만, 오래지 않아 약속을 폐기했다. 실행했던 약속한 개혁들도 도로 회수해 갔다.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개혁 염원을 배신한 탓에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첫째, 우파의 반격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약화된 것이므로 우파의 재집권(이라는 반동)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특히 심각했을 때 진보정당들과 노동운동의 지도부들이 문재인 편을 들거나 침묵한 것이 우파의 부상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파는 문재인을 두들겨서 그 왼쪽까지 침묵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자초한 것이다

문재인 포퓰리즘의 실체와 위기

민주당은 매우 일찍부터 자본가 계급의 정당이었다. 비록 꽤 오랫동안 자본가 계급의 제2선호 정당이었지만 말이다.

민주당은 2016년부터 4회 연속으로 전국 선거에서 이겼다. 특히,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는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문재인은 정부 초기에 대대적인 정경유착 수사와 재판 덕에 기업인들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구들도 대체로 청와대의 통제 하에 있었다. 친문 진영의 엄살과 달리, 그리고 이전 민주당 정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우파에 포위된 약체 정부가 아니었다.

민주당은 마음 같아서는 독일의 기독교민주당 같은 정당이 되고 싶어 한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70여 년의 기간 중 50년을 집권해 온 그런 정당 말이다. 그러나 한국 현실에서 이는 비현실적인 바람이므로 적어도 미국 민주당처럼 동등한 선호도를 누리는 지배계급 정당으로서 정권을 주고받는 양당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지배계급 정당으로서 한국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인 것은 명백하다.

물론 민주당은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해 왔다. 특히, 박근혜 탄핵 이후 지배계급으로서의 민주당을 통해 노동운동의 전진을 억제해 정치 안정을 이뤄야 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의 개혁 염원을 달래어, 자제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임무였던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이 개혁 배신으로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중도파 포퓰리즘이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중도 포퓰리즘의 실패를 우파가 이용하느냐 좌파(온건 좌파인 진보파를 포함함)가 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주류 정치권과 언론, 자유주의 정치평론가들은 포퓰리즘을 대중을 감정적 악선동으로 동원해 중도 좌우를 아우르는 온건한 균형을 위협하는 위험한 불안한 썸으로 싸잡아 정의한다.

포퓰리스트들이 기성 의회정치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은 그 시스템의 수혜자이자 운영자들인 주류 정당들을 불신하는 대중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류 정치는 포퓰리스트들이 국민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해 정치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의회정치 시스템을 결국 위협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포퓰리스트들이 극단적 이어서 정치적(심지어 문화적) 다원주의도 위협한다고 본다.

진중권 등 문재인 비판자들의 일부는 이런 서구적인 포퓰리즘 규정을 받아들여 친문 진영을 트럼프식 우익 포퓰리즘과 똑같이 취급한다.(그런데 좌파 노동단체 사회진보연대도 비슷한 포퓰리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서사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도 좌파 포퓰리즘이나 우익 포퓰리즘, 문재인 같은 중도파 포퓰리즘은 사회적 기반이 다르며, 전략도 다르고 그 논리 구조를 채우는 구체적인 정치적 내용도 다르다. 사실 좌파 포퓰리즘을 표방했다가, 선거에 성공하면서 온건한 중도좌파 정당으로 변해 가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스페인 포데모스)

포퓰리즘 담론이 사회 내 적대를 내세운다고 해도 소수 지배층에 대항할 존재로 설정된 대중(민중)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추구한다. 계급 문제를 희석시키는 나름의 국민적 통합 전략이다. 이것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에서 포퓰리즘을 일종의 계급 연합 전략이라고 규정하는 이유이다.

트럼프의 우익 포퓰리즘을 예로 들

면, 트럼프주의는 트럼프와 토머스 배럭, 스티브 파인버그, 리처드 르프락, 하워드 로버 같은 일부 억만장자 개인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한 주류 정치)로 피해를 본 후진적 노동계급 부분이나 서민층 중간계급을 소비니즘과 인종차별 같은 의제들을 동원해 묶어 내려는 시도이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정치적 양극화에 편승한 것이자 양극화를 촉진하는 성격을 띤다.

정치 안정

반면 문재인과 민주당의 중도파 포퓰리즘은 지배계급의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으로서 좌우를 견제해 정치 양극화를 억제하고, 기업주들을 위한 정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들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비판하기보다 정부의 협력 세력으로 포섭한다.

문재인은 진보계 운동 지도자들과 과거부터 연관을 맺어 왔다. 이들 다수는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집권을 희망하고 지지했다. 문재인은 이들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 신뢰를 얻어 내어 대화로 끌어들이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억제하려고 한다. 이 전략의 성공은 진보계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잘 설득하는 데 달려 있다.

문재인 식 포퓰리즘 전략의 핵심은 부패한 전통적 집권세력을 배제한 국민적 연합이다. 그래서 집권 초 반부패를 구호로 내세워 박근혜를 구속하고 적폐 수사를 추진했다. 이명박도 구속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좌파를 위축시키려고 심지어는 절반쯤 우군이었던 정의당도 무지하게 괴롭혔다.

조국 수사를 둘러싼 갈등에서 여권이 펼친 프레임도 구악인 부패 검찰의 정권 위협이었다. 이것이 핵심 지지층과 진보계 지도자 다수에게 먹혔던 것은 포퓰리즘의 효과였다.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 측의 프레임도 정권 부패 수사, 즉 '반부패 민주주의'였다. 그래서 조국 이후 검찰과의 갈등은 국가기관끼리의 갈등이라는 점뿐 아니라 문재인 식 포퓰리즘의 위선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이다.(윤석열 측의 정권 핵심부 수사를 지지하며 적극적인 반문재인으로 전환한 서민 교수와 진중권 등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들조차 문재인이 검찰 개혁, 공수처, 남북 평화, 반일

▶ 4면으로 이어짐

▶ 3면에서 이어짐

등을 제기하거나, 저명한 운동권 인사(가령 윤미향)를 영입하면 대부분 비판을 주춤하거나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경우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일부 좌파는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논리로 진정한 쟁점을 회피하기도 했다.

문재인은 임기 초에 박근혜가 실행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양대 지침과 성과연봉제를 폐기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양보를 하며 노동계 정치·조합 지도자들을 대화로 유도했다. 남북정상회담도 포퓰리즘적 지지를 얻는 소재로 잘 써먹었다.

그래서 2018년 말 (기업주들의 탐욕스런 불멘소리 속에서) 탄력근로제 계약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다가, 그 여파로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의 노사정 합의 노선이 2019년 초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을 때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포퓰리즘 전략은 이력저력 대중 투쟁을 어느 정도 억제해 왔다. 이런 투쟁 역제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기업주들도 문재인에게 지지를 제공해 왔다. 그 조건이 아직 유지되고 있어서 문재인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지는 않은 것이다. 우파 야당에 대해서는 아직 진보 염원 대중의 반감이 크고, 문재인이 줄타기가 무너지면 아래로부터의 불만이 투쟁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경솔하게 행동했다가는 자본가들 자기네에게 필요한 정치적 안정을 해칠 위험이 아직 있는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를 겪는 대중에게 조심성 없이 군 통치자들 때문에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에서 대중 반란이 일어났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코로나 양극화에 대응해 (자발적) 이익 공



반어공 산출물 기사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은 기업주들을 위한 정치 안정을 추구한다 2017년 7월 28일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대한 문재인

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로 성장한 산업의 하나인 배달 분야의 사실상 독점기업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자영업자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상생협의를체를 꾸리기로 하고, 이를 널리 홍보했다.

동시에 배달의민족 창업자이자 현 이사회 의장인 김봉진은 1조 원이 넘는 개인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 직전에 IT 대기업 카카오의 이사회 의장인 김범수는 10조 원 재산 중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인 이낙연은 이익공유제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이런 움직

임에서 얻었다고 하고, 곧장 노동계에 사회연대기금 입법과 기금 조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적 대타협에 노동계도 양보로 화답하라는 것이다.

2월 18일 문재인은 LDS(최소잔량주사) 주사기를 개발한 공장에 들러, 이를 개발한 중소기업들을 극찬하면서, 여기에 삼성이 도움을 줬다고 추켜세웠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기업들의 구실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나머지 국민 통합을 기대하는 포퓰리즘적 연행을 하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본가들과의 연결 통로도 소폭 재편됐다. 전통적으로 정권·정치권과의 통로가 돼

왔던 전경련이 약화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부상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최태원이 새 회장을 맡고 전통적 재벌들뿐 아니라 김범수, 김택진 등 신흥 IT 자본가들을 새 임원으로 영입했다. 이전 정부 때도 대한상의(두산 박용만 대표 체제)는 우파 정부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현 정부 하에서는 박용만이 주도해 정부에 요구한 '규제 샌드박스' 따위의 선물을 여러 개 받았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위기 모면용으로 문재인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요구였던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재계는 (소극적

으로) 반발했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들에서 실리를 챙겼다.

그러나 제스처와 미약한 양보로는 한국이 처한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비롯하는 기업주들의 요구와 우파의 압력을 문재인 정부가 이기기 어렵고, 개혁 염원을 포섭할 수도 없다. 그래서 노동개악뿐 아니라 한일위안부 합의 번복 약속 폐기,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폐기 등 지지층을 또다시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개혁 배신과 부패, 위선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심화가 속도를 높이면서 문재인기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위기의 성격과 선거 판세

민주당은 재·보선 국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인 신현수의 사표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었다. 봉합됐지만 상흔은 깊고, 비슷한 성격의 다른 갈등도 예상된다.

신현수는 검사 출신으로 퇴직 후 (악명 높은) 김앤장에서 일했고, 그 과정에서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인 갑을오로 텍 사측의 변호인도 했다. 그는 단순한 검찰 출신 인사가 아니다. 노무현의 청와대에도 파견돼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이 두 차례 대선 출마 때 모두 선거캠프에 참여한 친노·친문 인사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기조실장도 지냈다.

이런 인물이 검찰 인사 문제로 사의를 표했었던 것은 정권 중심부에서 검찰과의 관계, 레임덕 대응 문제로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러 엇갈린 보도가 있지만 박법계 등 강경파들은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장관까지 구속되는 마당에 검찰 단속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이 듯하다. 조국, 백원우, 윤건영(자명계좌) 등 측근들뿐 아니라 친문 진영의 후보들도 검찰 수사 타깃이다. 옵티머스 건

로 이낙연,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으로 임종석 등이 수사망에 포착돼 있다. 임종석은 이낙연으로 어렵다 싶으면 친문과 호남 기반을 계승해 이낙연 자리를 대체할 카드 중 하나다. 이낙연 연루 의혹이 터진 옵티머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지검장 자리에 윤석열 징계에 1인 다역으로 앞장섰던 심재철을 보낸 인사의 의도는 뻔한 것이다.

아마도 신현수는 지나친 강경 기조가 오히려 위험도를 높이고 판을 키워, 자칫 한 방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몇 명 희생하는 수준에서 검찰과 타협하는 것이 정권 핵심부 보호에 낫다고도 본 듯하다.

정권 말기로 가고 레임덕 위기가 깊어질수록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측근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측근들 일부를 내칠 수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이 내분으로 번진 듯하다.

지금의 선거 판세

조국 임면 국면에서,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파가 회복하는 듯하다가 조국 사퇴 후 우파 지지율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정부 지지율이 소폭 회복됐었다. 이는 조국의 위선과 이윤배



문재인에게 실망했지만 우파를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그렇다면 우파를 우습게 봐선 안 된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선 박영선·안철수·나경원·오세훈

반에 분노한 다수가 우파에 부화뇌동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문재인 임기 내내 우파는 지지율이 회복되다가 도로 떨어지고를 반복해 왔다. 문재인에게도 실망했지만 우파는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반(反)문재인과 중도를 표방한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안한 1위를 고수 중이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대체로 우세하다. 가상 3자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에게도 승산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중도'를 표방한 안철수와 우파인 국민의힘이 단일화하지 않는 것,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걱정해 문재인에 등을 돌렸던 일부가 우파 반대 투표를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1980년대 좌파 학계 출신이자 나중에 이명박(MB) 측근인 박형준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 후보는 김영춘이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정부비서관을 지내고 노무현

당으로 옮겨와 서울에서 재선을 하고는 부산으로 지역구를 옮기고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장관을 하며 노무현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를 당선시키려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재점화해서 박형준에게 타격을 주려고 한다.

정의당은 불출마를 결정했고, 진보당은 정의당보다도 더 존재감이 없어서 이번 재·보선에서 진보적 목소리는 별로 대변될 것 같지 않다.



조종자

진보·좌파와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분노를 적극 대변하고자 해야 한다

우파가 반사이익 얻을까?

만약에 재·보선 승리 가능성만 생각해 안철수로 반문재인 보수 단일화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데도 대선 전초전에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 이런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현재 야권의 쟁점은 후보 단일화 문제와,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경보수 색깔을 어떻게 가릴까 하는 문제다.

강경보수론은 올해 1월 나경원의 “우파 짜장면” 발언으로 시작했다. 짬짜면을 시켜도 둘을 한 그릇에 섞지 않고 각각 내주므로, 중도라는 이름으로 진보/보수 경계를 흐리지 말고 (좌파가 짬뽕이라면) 우파는 짜장면을 맛있게 제공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짬뽕에 질린 국민이 짜장을 선택할 거라는 것이다.

오세훈과 오신환은 강경보수로는 떠나간 민심을 잡을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지난 총선 참패가 바로 황교안-나경원 지도부가 태극기 우파 세력과 연합한 노선을 걸은 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였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나경원은 2월 초 노무현의 사람이자 삼성 임원

출신인 진대제를 영입하고 “나경영” 소리를 들어가며 대대적 복지지출 공약을 내걸었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연거푸 노력을 하는 것이다.

우파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다가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는 것은 부패하고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했던 강성우파 정부 시절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상당히 때문이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앞선다지만 박형준은 친박도 강경보수도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지금 우파의 재집권이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다. 차기 대선 지지율을 보면, 비친문이고 더 개혁적으로 평가돼 온 이재명이 1위를 달린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우파 지지층은 중도파처럼 되기에 반발하고 중도층은 아직도 국민의힘을 싫어한다. 그래서 ‘중도화’한다고 탈당했던 바른미래당이 실패하고 다들 복당했던 것이다. 정권을 잡던 시절 전통적 지지층이 중도우파와 강경우파로 분열된 조건 하에서 이를 아우를 지도자도 없고, 지금은 고만고만한 기회주의자들

이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 후보 선출을 멀찌감치 11월로 미룬 것도 이런 고민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총선 때는 신흥 재벌 격인 엔씨소프트의 김택진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7월에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는 윤석열을 영입할 시간을 벌려는 계산일지도 모르겠다.

특히, 우파 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지난해 총선 때 재난지원금 논쟁(이나 이후 재정, 소득 지원 논쟁)에서도 지원에 인색한 입장을 고수하다가 표를 잃었다. 그럼에도 부산시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하고, 서울에서 민주당이 패한다면, 국민의힘과 우파가 강화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수십 년을 통치해 온 세력이고 지배계급의 전통적 정당이었으므로 그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게다가 경제 위기 지속이 사회적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어서 이것이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파는 다시 성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노동자 운동의 대응이 중요하다.

노동운동, 문재인 정부와 확실히 결별해야

이런 배경에서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을지 모른다고 걱정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의 일부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심정으로 민주당에게 다시 표를 던질 수 있다.

이를 이용하려고 문재인은 다급하게 왼쪽 깡뺨이를 쳐고 있다. 2월 17일 문재인은 고(故) 백기완 선생의 빈소에 직접 조문을 가 진보연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 사찰을 폭로해 진보계의 위기감도 자극하려 한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문재인이 직접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선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를 수십만 개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정도로 흐지부지돼 있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의 액수와 범위를 늘려서 지급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보계가 이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 실제로 진보적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다시 기대를 가졌다가는 환멸만 더 커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노동계 대표 조직들(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의 지도부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을 진보 쪽으로 가져오려는 좌파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진보정당들의 행보에는 객관적 위기에 걸맞은 좌파적 과감함과 대안적 호소력이 별로 없다. 조국 국면에서 실망을 시킨 뒤로는 특히 그렇다.

물론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의당(과 진보당)의 정치적 존재감을 미미하게 만들지만, 그 당들의 온건한 노선이 또 한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선거 영역에서 노동계를 대표해 온 정의당은 일종의 좌파적 포퓰리즘 노선으로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얻겠다는 기존 노선에 더해,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질서의 불안정, 경제 침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위기의 속에서 체제 안정에 협조해야 한다는 압력에 크게 취약해진 듯하다. 체제 안정에

협조하는 것과, 대중의 불만과 개혁 염원을 대변하는 것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행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정의당이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지만 선거 판세에는 아무 영향도 없다. 진보당은 후보를 냈지만, 마찬가지로 판세에 영향을 못 주고 있다. 진보당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삼가거나 절제해 왔다. 진보당은 선거 부정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고 독자 완주를 호언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폭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과 단일화하면 더 손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재·보선에서 정부에 대한 실망이나 우파에 대한 반감은 정치적으로 표현되기가 더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객관적 상황 때문에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문재인과 우파 야당 모두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권력을 지키거나 쟁취하려고 한다. 위기 때문에, 공식정치를 주름잡던 양당이 실은 매우 초라한 처지인 것이다.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고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 상반기의 선거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게 됐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파 야당의 고전을 보면, 대중이 진보를 참칭한 문재인에게 환멸을 느끼지만 곧장 우파 지지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 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감과 분노를 적극 대변하며 문재인 정부에 확실히 저항해야만 우파의 부상에 맞설 수 있다. 서두의 말을 반복하자면, 우파를 두려워해 문재인 편을 들거나 침묵하면 오히려 우파의 부상 가능성을 키운다. 우파 측의 문재인 비판으로 그 왼쪽까지 침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좌파와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와 확실히 결별하고 노동계급을 단결시키는 정치를 고무하면서 팬데믹과 경제 침체라는 이중의 위기에 맞설 대중적 계급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 점에서 혁명적 좌파의 존재가 중요하다. 이들이 막중한 과제를 전진시키려면 기회주의와 종파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휴대전화번호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이메일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미국 사회주의자 초청 토론

바이든, 트럼프보다 얼마나 나올까

이 글은 2월 20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바이든, 트럼프보다 얼마나 나올까?’에서 야니스 델라톨라스(사진)가 한 발표와 정리 발언을 기사로 옮긴 것이다. 야니스 델라톨라스는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으로,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 토론회를 통역한 천경록은 전문 통역자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반갑습니다. 노동자연대의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 출신인데, 10대 때 아테네에서 <노동자 연대>라는 신문을 판매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스 단체[노동자연대의 자매 단체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신문 제호가 <노동자 연대>입니다.

먼저, 바이든 정부를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바이든이 어떻게 집권했는지, 트럼프 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후, 신자유주의 중도와 민주당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버니 샌더스 돌풍과 샌더스 선거운동을 수백만 청년이 열렬히 지지한 것, 또 미국민주사회당(DSA)이 이제 9만 명 규모로 성장해 196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 가장 큰 좌파 단체가 된 데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회주의가 인기를 끄는 것은, 냉전 시기의 정치 구도가 역전된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 50퍼센트 이상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응답하고, 전체 인구의 약 40퍼센트가 모종의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합니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미국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크게 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그나마의 일자리도 임금과 노동 조건이 형편없습니다. 교육 시장화 때문에 학생들은 막대한 빚에 시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미국인 4200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실업 중대 때문에 그 수는 이전보다 훨씬 늘었을 것입니다.

트럼프 하의 정치 양극화, 코로나19,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항쟁, 파시스트 위협의 등장 등을 보면, 신자유주의 중도의 위기는 오바마 시대부터 시작됐고, 트럼프 집권 후에는 다름 아닌 백악관에서 인종차별적 정책이 나온 것 때문에 극우 반동이 더욱 강화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인종차별적 공격은 오바마 자신을 향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흑인인 데에 불만을 품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우겼습니다. 그것이 이후 인종차별적인 ‘티파티’ 운동으로 발전했고, 이 운동이 트럼프 하에서 성장해 오늘날 목도하는 극우 운동으로 발전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을 거치면서 극우·파시스트 운동이 조직력과 힘을 키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민주사회당의 성장, 버니 샌더스 돌풍, 사회주의 인기 상승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좌우 모두로 양극화가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후, 정부의 대응 부족을 규탄하며 먼저 교사들이, 그 다음으로 간호사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뉴욕 간호사들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PPD)를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했고, 뉴욕 교사들은 투쟁으로 뉴욕시 시장에 휴교령을 강제했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비로 미국 전역에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흑인·라틴계 노동자들이 — 이들은 ‘필수 업무’에 종사하지만 대개 미등록 이민자들입니다 — 바이러스에 불비례하게 많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이 큰 구실을 했습니다. 예컨대 흑인은 코로나19 사망률이 백인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이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동력이 됐습니다. 이 운동은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 후 미국의 모든 주(州)에서 분출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운동은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남부 주(州)들에서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연대 운동이 벌어졌죠.

트럼프는 자기 정치적 기반을 단속하고자 인종차별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안



지난해 미국을 뒤흔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티파(Antifa) 운동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안티파’는 반(反)파시즘 운동가들과 소수 극좌파들의 느슨한 연합체입니다. 트럼프는 ‘안티파’를 공격해서 사실상 좌파 전체를 공격하고, 인종차별적 극우를 지원한 것입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인종차별적 유물·동상·상징물 철거를 요구하며 싸울 때 트럼프는 이들을 ‘안티파’, 즉 좌파라고 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파괴하려고 연방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트럼프는 오리건주(州) 포틀랜드에 연방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지난 여름과 가을 사이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강력하게 벌어졌는데, 이를 진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포틀랜드에서 기반을 닦으려던 극우 ‘프라우드 보이스’

를 지원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 연방 병력이 몇몇 시위대를 불법체포하면서, 그에 항의하는 운동이 거세게 벌어졌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병력을 철수해야 했고, ‘프라우드 보이스’는 포틀랜드에서 기반을 닦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팬데믹 대처에 완전히 실패한 것 때문에 패배하리라 예상했는지 대선이 사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시기에 경제 재가동을 요구하며 시위한 극우를 고무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자기 기반을 단속하려 극우를 부추긴 것이 결국 올해 1월 파시스트 강파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낳은 것입니다.

바이든

바이든은 대선에서 낙승해야 마땅했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약 8100만 표를, 트럼프가 약 7400만 표를 얻어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선거 후 며칠 동안은 바이든이 이길지가 불투명했습니다.

이는 바이든의 대선 선거운동이 노동계급의 정서와 필요에 전혀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 크다고 봅니다. 예컨대 팬데믹 와중에 치르는 대선 선거운동에서,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는 전 국민 단일의료보험(메디케어 포 올)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시절의 실패한 건강보험 정책 ‘오바마케어’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윤을 우선시한 이 정책은 대형 보험사들의 배만 불렀고,

4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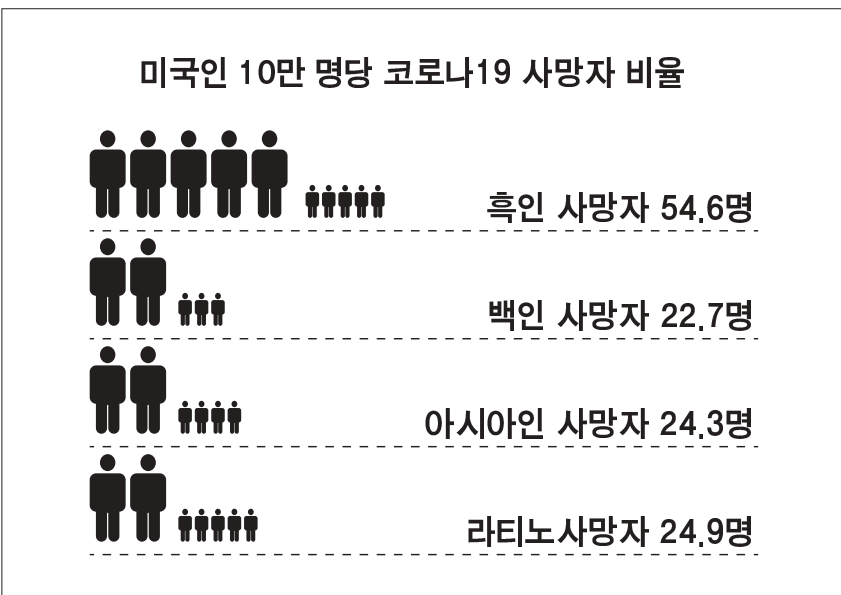
바이든·해리스는 운동이 요구한 개혁 조치들도 반대했습니다. 예컨대 바이든은 경찰 재정을 삭감해 복지로 돌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화석연료 체제를 소위 ‘녹색’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후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인 ‘그린 뉴딜’도 극구 반대했습니다. 많은 노동조합이 ‘그린 뉴딜’을 지지했는데 말입니다.

물론 트럼프 시대의 노골적인 인종차별, 성차별, 외국인 혐오에 비하면 바이든 정부가 신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가 그렇습니다.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고(여성으로서는 최고위직까지 오른 것입니다) 최초의 흑인 부통령, 아시아계 부통령이라고 찬사를 받습니다. 또 내각 구성이 인종·성·젠더 면에서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은 오바마 시대 신자유주의의 재판입니다.

바이든의 국방장관 지명자인 퇴역장성 로이드 오스틴은, 임명되면 미국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스틴은 이라크 전쟁을 이끈 지휘관이었습니다. 재무장관 지명자 재닛 옐런은, 임명되면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옐런은 골드만삭스·시티그룹·구글 같은 대기업들의 친구입니다. 이런 사례는 많습시다만, 더 들지는 않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바이든 정부가 오바





바이든 내각 구성은 인종·성·젠더 면에서 다양하지만 이들의 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이다

마 시대의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면 민주당 권력층과 미국 대기업들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바이든을 처음부터 아주 강력히 지지했죠. 하지만 수많은 대중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더해지는 것뿐일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이 물려받은 미국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가 결코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데다 이번 팬데믹으로 더한층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의 불평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바이든과 해리스의 정책이 사람들에게 전가할 고통도 더욱 클 것입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봅시다. 바이든이 결국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했습니다만, 파리 협약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에 크게 부족한 협약이라고 환경운동가들의 비판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주에 텍사스주(州)에서 전례없이 혹독한 겨울 태풍이 한 주 동안 몰아쳤습니다. 우리는 기후 재앙, 아니 기후 대란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산불이 두 달 동안 있었고, 그 전에는 호주에서 대화재가 있었죠. 파리 협약 복귀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지정학적 상황과 미국 제국주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여러 조약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이든은 좀더 전통적인 미국 제국주의 모델로 복귀하려는 듯합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와 중국을, 특히 중국을 더 많이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습니다. TPP는 오바마 시절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 추진한 대규모 무역 협정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 들며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14개 나라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일본·한국·호주도 동참해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중동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이란·러시아에 밀려 영향력이 약화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이 거의 실패하고 탈레반이 사실상 국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로 전함을 파견하던 때, 미군 폭격기가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비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군을 위해 최근에 새 기지를 구축했고, 여기에 미군 병사들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는 명백히 이란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최근 바이든은 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인들이 제재 때문에, 특히 팬데믹 하에서 더욱더 크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과제

미국 민주당은 대기업들을 위한 자본가 정당이기 때문에 결코 노동자들

과 사회운동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최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서 봤듯 말입니다. 민주당은 운동이나 노동조합과의 협력보다 공화당과의 협력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미국인과 미국의 혁명적 좌파들이 민주당과 단절하고, 그 대안으로 독립적 노동자 정당 건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민주사회당의 전략이 아닙니다. 민주사회당은 민주당에 남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독립적 노동자 정당이 부상한다면 이는 계급투쟁 고양의 결과이지 한 줌 사회주의자들의 창당 선언 덕은 아닐 것임을 지적해야 합니다.

발제 시간이다 된 듯해,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혁명적 좌파들은 선거 정치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운동에 주목하고 운동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반동적인 정부라던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섰고, 인종차별 반대 행쟁이 분출했고, 교사 파업들이 눈부신 승리를 거두는 등 많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사상 최초로 단단히 조직된 파시스트 운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혁명적 좌파들은 반자본주의 정당이 건설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파시스트들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좌파들이 직면한 도전입니다.



올해 1월, 반파시즘 운동 건설의 필요성을 보여 준 미국 극우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진 출처: Tyler Member(틀리거)

정리 발언

한 동지가 파시즘에 관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배계급이 혁명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 노동계급 혁명이 진정한 위협일 때 파시즘을 구원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파시즘의 역사적인 구실입니다. 1930년대 유럽에서 봤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1930년대와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미국 지배계급이 파시즘을 실질적 해법으로 여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트럼프가 4년 동안 퍼뜨렸던 온갖 인종차별 때문에 미국에서 전에 없이 인종차별이 득세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인종차별적 극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파시즘이 계속 성장할 토양이 생기고, 인종차별이 미국 사회 전반에 점점 만연해졌습니다. 당장 파시스트들의 집권에 녹색불이 켜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 동지가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미국 국가에 파시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고, 파시즘이 호소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파시즘이 거리에서 흑인·이주민·성소수자·유대인·무슬림 등에 진정한 위협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노동자 혁명이 현실적 위협으로 부상해, 파시스트를 동원해 이를 분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컨대 그리스를 보면,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이 원내에 진입했고, 이는 전 세계 파시스트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극우 정당들이 추구할 모델이 된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파시스트들이 군대·경찰·보안기관에 침투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마린 르펜이 내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을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은 일찌감치 극우와 파시즘에 맞설 공동전선 건설을 강조해 왔습니다. 파시즘이 실질적 위협이 되기 전에 그런 공

동전선을 빨리 건설할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파시즘은 황금새벽당 부상 훨씬 이전부터 문제였습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국제사회주의경향이 주도해 [1970년대에] ‘반나치동맹’(ANL)을, 최근에는 ‘인종차별에 맞서 일어서자’를 건설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영국 노동당, 공산당, 노동조합들, 영국 노동당이 참가하는 광범한 공동전선입니다. 이런 공동전선 덕에 영국에서는 파시즘의 성장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안타깝게도 프랑스에는 소위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경향의 혁명적 좌파들이 — 저도 그들의 ‘자본주의 철폐’라는 목표에야 동감합니다만 — [공동전선을 구축하지 않아] 극우·파시즘이 준동할 공간을 열어 줬습니다. 이 때문에 마린 르펜이 프랑스에서 그토록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 경향은 자매 단체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가능한 한 강력한 반(反)파시즘 공동전선을 구축하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과제는, 파시즘에 맞선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하고 혁명적 좌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노동계급 권력 문제는 좀더 장기적 목표이겠지만, 파시즘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당면한 과제일 것입니다.

공동전선

‘오늘날 공동전선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 하는 아주 좋은 질문도 있습니다.

트로츠키가 1930년대에 공동전선에 관해 쓸 때, 트로츠키는 사실상 독일 공산당과 사민당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당은 매우 거대한 노동계급 정당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당이 없죠. 이 때문에 제4인터내셔널 경향 일부는 공동전선 전술이 오늘날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공동전선은 어떤 모습일까요? 급진 좌파의 과제는, 급진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의 공동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안티 파’가 있지만, ‘안티파’는 전문적인 반(反)파시즘 투사들의 소규모 단체이고 매우 전투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광범한 인종차별 반대 단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 단체, 아랍인 단체, 성소수자 단체,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단체를 건설하는 것이 공동전선을 오늘날 실현 가능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극우

미국의 성장하는 극우·파시스트 세력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상당수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무장 단체들인데, ‘스리 퍼센터스’, ‘오스 키퍼스’ 등이 그런 단체입니다.

‘프라우드 보이즈’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인우월적이고 성차별적이며 낙태권에도 반대하는 파시스트 단체인데, 그간 미국 여러 도시에서 기반을 다지려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이들이 나타날 때마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극우·파시즘의 위협은 실제로 있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화당이 트럼프 하에서 겪은 변화도 살펴 봐야 합니다.

미국 대기업들과 대자본가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민주당 모두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자동차·석유 부문 등 전통적 대기업들은 양당에 거의 똑같은 액수의 후원을 해 왔습니다. 누가 당선하든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재선 선거운동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미국 자본주의에 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제에서 말씀 드렸지만, 트럼프는 여러 협정에서 탈퇴하는 등 미국을 고립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주요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에서는 이란이 득을 봤습니다.

미국 자본가들은 단기적으로야 트럼프가 제공한 감세 혜택을 누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자본주의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트럼프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바이든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이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의 미래를 점치기 이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이 유럽의 극우 정당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변모하는 듯 보입니다. 예컨대 공화당 의원 중 147명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투표했습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 40퍼센트가 정치 폭력이 어떤 경우



“인종차별주의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정치 양극화 속에 트럼프의 무책임한 팬데믹 대응, 인종차별주의 활용,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불만이 분출했다

에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나 오스트리아의 파시스트 정당 자유당(FPO)에서나 볼 법한 것입니다.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공화당이 분열하지 않을 듯합니다. 미국 정치 자체가 양당 체제에 맞게 설계돼 있어서 제3당은 거의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민 정책

바이든의 이민 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시절 정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미국-멕시코 주요 국경 도시인 샌디에고·엘파소 등에 국경 장벽이 처음 생긴 것은 1990년대 민주당 빌 클린턴 정부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장벽 때문에 이주민들은 매우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미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만 명이 사막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사막에서 탈수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무장 집단들이 이주민들을 사살하는 것도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클린턴 정부 때부터 있던 일입니다. 당시 이민 정책 책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클린턴은 이런 일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런 강도 높은 국경 통제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트럼프 시절 이민 정책을

되돌려 ‘이주 아동 추방 유예 행정명령’(DACA)을 복원하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이민자 300만 명이 추방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 권익 활동가들은 오바마를 미 대통령의 별칭인 “최고 사령관”에 빗대 “최고 추방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악명 높은 국경 장벽을 더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국경 장벽을 없앨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민자 강제 수용 정책도 오바마 정부 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경 장벽 건설, 이민자 가족 분리 수용 — 제네바 협정 위반입니다 — 등의 정책을 손쉽게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상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 후 운동의 상당 부분이 민주당에 포섭됐습니다. 이는 차악론이 문제임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른바 “현실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항쟁이 최고조일 때는 경찰 재정을 삭감하고 심지어 해체하는 요구가 분출하고, 실제로 몇몇 시의회에서 경찰 재정 지원 중단을 표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사그라들자, 이른바 “현실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통령도 흑인이고, 사실 민주

당이 공화당보다 경찰 폭력에 잘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민주당 집권은 흑인을 위한 정의가 구현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이전 오바마 때도 흑인과 백인 사이의 임금 격차가 계속 커져 1960년대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흑인 대통령 하에서도 소위 “현실론”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실론” 문제는 민주당하에도 있습니다. 민주사회당이 민주당과 공식적으로 결별하지 않는 것도 “현실론” 탓이 큼니다.

버니 샌더스와 바이든의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해 좌파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샌더스가 처음에 힐러리 클린턴을, 이번에 바이든을 지지할 때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부 좌파들이 말하는 “깨끗한 결별”*이 결국 이론일 뿐이고, 차악론에 밀려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결별” 주장대로라면, 샌더스가 두 차례 예비경선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았는데, 경선 패배 후에는 지지자들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는 미국 선거 제도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론”과 차악론의 문제 때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적 좌파들에게 제3당 건설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영국 노동당 같은 정당을 미국에서 만들자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소수 혁명가들이 사회민주주의 정당 창당을 선언한다고 대중적 노동자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계급투쟁이 벌어져야 하고, 노동조합이 강력해야 하고, 노동운동이 자본에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르크스21’을 포함한 반자본주의 좌파들은 운동에서 영감을

용어설명

“깨끗한 결별”

민주사회당(DSA) 창당 때부터 미국 민주당과 관계를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나온 표현. 민주당을 안에서 개혁할 것인가(“재편”), 민주당과 완전히 결별하고 제3당을 창당할 것인가(“깨끗한 결별”), 민주당과 독립적 조직을 갖추지만 공식 선거 때는 민주당 예비경선에 참여할 것인가(“지저분한 결별”)로 입장이 나뉘었다. 2016년 버니 샌더스 선거운동을 계기로 논쟁이 재점화됐다.

받고 운동에 주목합니다. 지난해 인종차별 반대 항쟁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 운동에 참가한 모든 사람, 민주사회당 지지자, 샌더스 선거운동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 등을 한데 모아 극우에 맞서고 그 운동 안에서 반자본주의 정치를 토론하고 계급 문제를 다시 중요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앞서 미국 제국주의가 트럼프 정부를 거치며 악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훔칠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임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кен은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고, 이란 제재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동으로 미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군사 기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자신의 입지를 되찾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이 남중국해에 전함을 파견한 것은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분명 긴장이 첨예해질 것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바이든 정부 하에서 벌어지리라 확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쟁 위협을 비롯한 여러 위협에 맞서 국제 연대를 구축할 과제가 있습니다.

통역 천경록



버니 샌더스의 바이든 지지는 변화 염원을 실망시켰다



서평 |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김영사)

기술 혁신만으로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

빌 게이츠는 자신의 새 책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김영사)에서 경쟁이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소피 스콰이어가 빌 게이츠의 주장을 반박한다.

빌 게이츠의 새 책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은 억만장자가 제시하는 기후 재앙 관리 계획이다.

게이츠는 각국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게이츠는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매년 온실가스 510억 톤을 대기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게이츠는 (억만장자가 다 그렇듯)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체제 안에서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는 애초에 기후 재앙을 우리 눈앞에 닥치게 한 것이 바로 이 체제(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지구를 구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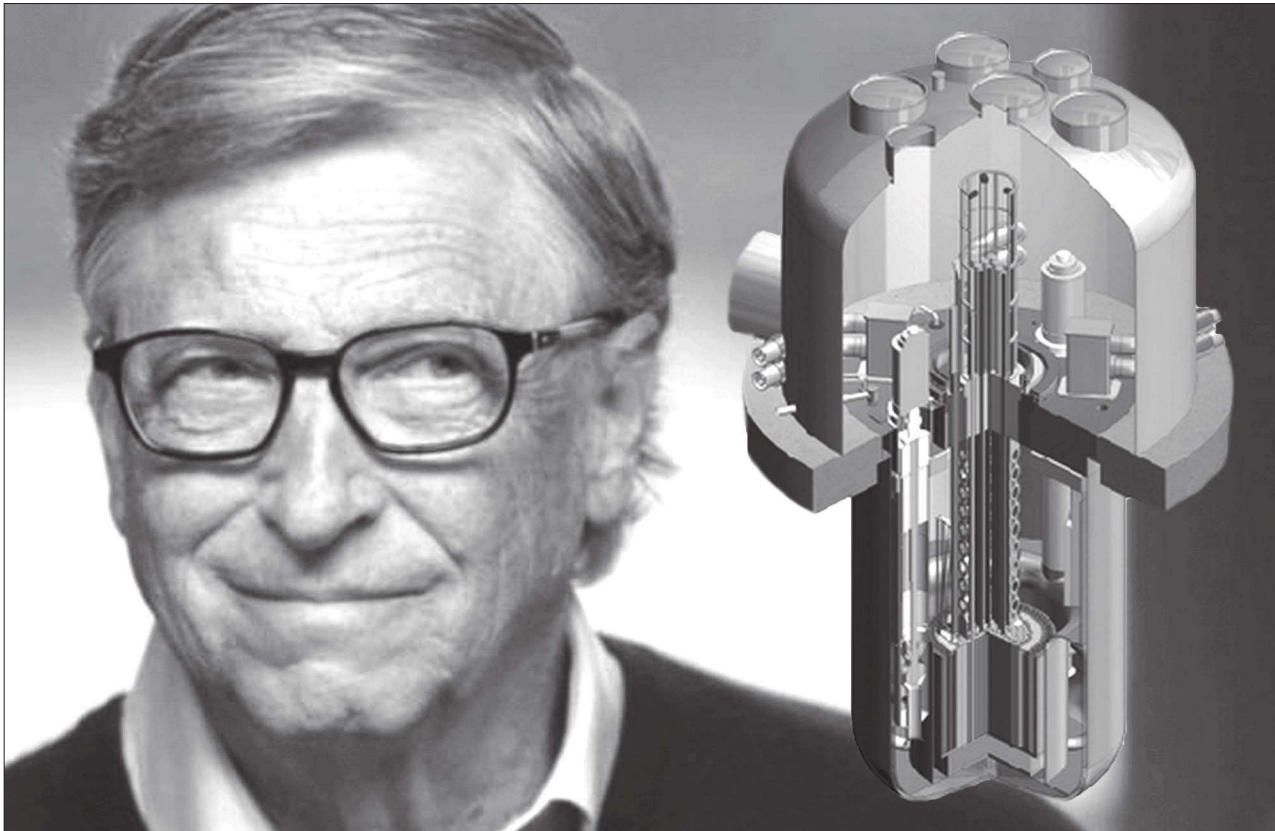
이어서 게이츠는 운송, 농업, 에너지 산업을 예로 들며 주요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다룬 장들은 기후·녹색 기술 혁신에 대한 온갖 세부 사항에 게이츠 자신의 통찰을 많이 곁들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게이츠는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 모두에 관심을 유도하고, 다른 기업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프로젝트들에 투자하도록 독려한다.

하지만 그런 벤처 사업들 중에는 게이츠 자신조차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게이츠는 ‘직접공기포집’(DAC)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이 공정은 비용이 어처구니없이 많이 든다.

게이츠는 지구공학도 언급한다. 지



빌 게이츠가 제시한 시장, 경쟁, 지구공학, 핵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다. 사진은 빌 게이츠가 제안하는 소형 핵 발전소 테라파워

구공학은 지구의 환경 변화를 뜻대로 조작하려 하는 학문이다.

이것도 기술에 의존하는 또 다른 값비싼 벤처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 중 몇몇은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신기술이 성과를 내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당장 절박한 기후 위기의 대응책이 아니다.

게이츠는 (성공할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미칠 기술을 더 선호한다. 더 오래 지속될 기술들이 아니라 말이다. 효과가 미지수일지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또, 게이츠는 책에서 신기술을 옹호하지만 오랫동안 존재했던 기술에는 별 관심이 없다. 한 구절에서 게이츠는 태양광 발전은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고 풍력 발전은 “너무 많은 땅”을 차지

한다고 불평한다.

2019년에 게이츠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새로운 것”에 돌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잠재력

풍력·태양광·조력 발전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로, 제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풍력·태양광 산업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 훨씬 싼 값에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다.

억만장자들에게 문제는 이 산업들이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흔히 각국 정부들은 풍력·태양광 발전은 엄격하게 규제한다. 민간 기업

이 두 산업에서 거두는 수익은 여러 해에 걸쳐 감소했다.

설령 에너지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더라도, 이들이 막대한 돈이 묶여 있는 화석 연료 산업을 포기하지는 못할 듯하다.

게이츠는 풍력·태양광 발전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반면 핵에너지를 적극 옹호한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게이츠는 핵발전 기업 테라파워의 창립자다. 게이츠는 핵 발전을 혁신하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근거 없이 장담한다.

이 책은 기후 위기를 해결할 기술을 록 집어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혁신”이 핵심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기술 발전만으로는 기후 위기의 해법을 내놓을 수 없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다. 게이츠 같은 자본가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게이츠는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으로 새로운 기후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경쟁은 기술 혁신을 제약한다.

게이츠는 각국 정부들이 “투자 격차를 염두에 두어” 하며,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이 더 많이 벌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게이츠는 기업이 기후 연구에 투자할 때 “위험을 더 감수”하라고 부추기고,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쟁 심화 역시 기후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이윤

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체제에서 자본가들은 남보다 앞서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경쟁하지 않으면 경쟁자에게 추월당할 것이다.

이 때문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할 뿐 아니라 지구의 천연 자

원 또한 갈취해야 한다.

자본가들은 단기적 이윤 증대에만 골몰할 뿐 장기적인 해법에는 관심이 없다.

이 때문에 삼림이 파괴되고, 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지구 온난화가 벌어졌다.

예컨대 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경쟁이 심화되면, 가혹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무질서한 체제가 더 무질서해질 뿐이다.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되려면, 재생 에너지 산업을 대기업 소유가 아니라 공적 소유 하에 두어야 한다.

물론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의 핵심 구실 중 하나는 게이츠와 대기업에 체제 혼란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외려 기후 문제 해결의 주축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다.

또한 게이츠는 환경에 관해 이래저래 떠들지만, 아직 화석 연료 산업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다.

게이츠는 2019년 말까지는 화석 연료 산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게이츠 재단이 공개한 기록을 보면, 2019년 말에도 게이츠 재단은 7100만 파운드(약 820억 원) 이상을 석유·천연가스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었다. 석유 기업 엑슨모빌·셰브론·BP도 투자 대상이었다.

게이츠는 세계 최대 개인 제트기 운행사 시그니처 애비에이션의 지분 19퍼센트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게이츠가 내세우는 (기후 재앙을 피하려 애쓰는 자선가라는) 이미지와 실제로 하는 일 사이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

이 책이 분명히 보여 주는 사실 하나는 기후에 대한 논의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다.

과거에는 석유 기업 웰 같은 대기업들은 기후 변화를 아예 부정했다.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게 부유한 사람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자는 책을 썼다.

기업들은 친환경적으로 보이려 태세를 바꿨다. 여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후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다수는 비극적인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후 변화를 초래한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책은 그런 급진적 관점에 반론을 제시하려 한다.

기후 위기에 대한 해법을 자유 시장에서 찾을 수 있고, 어쩌면 정치인들과 세계 지도자들도 거기에 기여할 수 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게이츠는 틀렸다. 기후 위기는 애초에 이를 초래한 지배자들에게서 체제에 대한 통제력을 빼앗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위크〉2743호 번역 최병현

왜 언론은 부자들을 띄워 줄까?

게이츠의 책은 언론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언론은 게이츠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우리에게 하사하고 막대한 돈을 자선 사업에 쏟아 부은 친근한 억만장자라고 묘사한다.

이제 게이츠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처하는 데에 자신의 부와 지혜를 선사하는 선구자 행세를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언론 일각에서 게이츠를 호의적으로 보는 데에는, 게이츠의 막대한 기부금 덕도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해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200만 파운드(약 31억 원) 넘게 기부했다. 사실, 지난 9년

동안 게이츠 재단은 언론사 ‘가디언 미디어 그룹’의 여러 부서에 600만 파운드(약 95억 원) 넘는 보조금을 제공했다.

2월 17일자 〈가디언〉이 게이츠의 새 책을 극찬하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의 서평을 게재한 것도 전혀 놀랍지 않다.

게이츠 재단은 2019년 〈BBC〉의 자선 사업 ‘미디어 액션’에 145만 5485파운드(약 23억 원)를, 프랑스 신문 〈르몽드〉에 152만 1292파운드(약 24억 원)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 정보는 숨겨져 있지도 않다. 게이츠 재단 웹사이트에서 기부 목록을 검색하기만 해도 나온다.

게이츠 재단은 심지어 기부가 언론의 논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게이츠에게는 만족스럽게도, 연구 결과 “기부자들이 언론에 특정 논조를 요구했다는 증거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게이츠는 자신의 기후 변화 대응 계획에 대한 지지를 바란다. 많은 언론은 자신들이 받은 돈의 대가로 게이츠를 지원할 태세가 돼 있다.

게이츠에 관한 기사들을 읽다 보면, 억만장자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 쉬운 것이다.

억만장자들의 혁신과 자선이 사람들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사실 억만장자들이 하는 자선 사업은 사람들을 돕는 것과는 별 관련이 없으며, 전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다.

미얀마와 민주주의 투쟁

거리는 시위대로 미어터졌다. 학생들은 즉석에서 만든 군사 정부 규탄 현수막을 들고 무리 지어 시위대를 누비며 구호를 외쳤다.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 노동자 대표들이 안전모를 쓴 기술자들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한데 섞였다.

이는 오늘날 미얀마(버마)의 모습일 수도 있고, 2007년과 1988년에 미얀마를 뒤덮은 시위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운동들은 모두, 계급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군사 정권에 맞서 이해관계가 같다는 환상 때문에 패배했다.

현재 대규모 시위 물결에도 노동자 대표들이 빼곡히 찼다. 이들이야말로 혹독한 탄압으로 낭자했던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저항의 역사를 만들 희망이다.

그러나 기회를 포착하려면, 평범한 사람들이 말만 그럴싸한 자유주의자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힘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1988년 8월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이 운동을 “8888 항쟁”이라고 불렀다. 이 운동은 그보다 몇 달 전 벌어진 사소해 보이는 사건(아래 서술할 양곤의 한 찻집에서 음파 때문에 일어난 다툼)을 계기로 촉발됐다.

죽음

정부 하급 관리의 아들이 한 학생을 찢어 죽였는데, 군부는 이 살인을 덮으려고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이미 오랫동안 이어진 군부 독재와 경제 침체에 분노하고 있었다.

1962년 이래로 군사 정권을 이끌던 장군 네 윈은 시위 진압 경찰을 보내 학생들을 유혈 진압했다.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체포됐다.

목격자 버틀 린트너는 허다했던 대학살 중 하나를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하얀 다리’라고 부르던 지하 배수로를 나오자마자 멈춰섰다. 철조망이 우리 앞 도로를 가로질러 쳐 있었다. 공포스럽게도 그 너머에는 군인들이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채 우리를 겨누고 있었다.

“이를 보고 우리는 뒤를 돌아봤다. 오금이 저렸다. ‘론테인[시위 진압 경찰 특수부대] 수백 명이 철모를 쓰고 곤봉, 소총, 강철로 날을 세운 방패로 무장하고 있었다. ... [진압] 명령이 떨어지자 론테인은 학생들에게 돌격했다.

“곤봉이 바람 소리를 내면 뼈가 부러졌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학생들의 신음과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 한 시간쯤 지나자, 광란의 폭력이 끝났다. “시체들은 피로 웅덩이를 만들며 거리에 온통 널브러져 있었다. ‘하얀 다리’도 붉게 물들었다.”

그럼에도 운동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탄압 때문에 [군부 독재 규탄] 운동이 노동자와 지식인 모두에 확산됐다.

정권은 정면 대결로 응수했다. 1988년 8월 정부는 학생 시위 진압을



미얀마 노동자들은 아웅산 수치 같은 자유주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사용해야 한다. 2월 22일 시위에 나선 미얀마 노동자들

지휘한 장군 세인 트윈을 수반으로 내세웠다. 트윈은 공장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몇 주 동안은 투쟁이 들끓었다. 대규모 시위와 수백만 명이 참가한 총파업이 벌어졌다. 군 기관들이 정부에 등을 돌렸다. 한 달 동안 군 장성들은 완전히 마비됐다.

노동자들은 지역 위원회를 수립했고 농촌에서는 농부들도 시위에 참가했다.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임금과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투쟁을 민주주의 투쟁과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다. 이들에게 두 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무리 지어 관공서 건물들을 습격했다. 정권이 완전히 끝장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운동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운동 내 분단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운동 지도부를 구성하던 작지만 중요한 계층인 중간계급 지식인들은 아래로부터의 행동에 겁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권의 통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싫어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 자신이 새로운 미얀마를 주도하기를 바랐다. 거리 전투와 파업을 벌이는 빈민촌 폭도가 아니라 말이다.

이 유복한 자들은, 겉보기에는 민주적이지만 다수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체제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다.

트윈은 계산된 움직임 하에 사임했

고 이후 정권은 군사 정권을 지지하는 민간인을 수반으로 내세웠다.

군부는 이로써 민주주의 운동의 “존경받는” 지도부가 좀 더 “난폭한” 부위를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이 시점에서 전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인물인 아웅산 수치가 무대의 중심에 섰다.

수치는 영국 식민 점령에 맞서다 암살당한 독립 투사 아웅산의 딸이다. 미얀마인 대다수가 아웅산을 “국부(國父)”라고 여겼다.

수치는 옥스퍼드대학교를 나왔고 유럽인과 결혼했으며 유엔에서 활동했다.

이제 수치는, 군사 독재를 싫어한 일군의 퇴역 장교들과 함께 민족민주동맹(NLD)을 창당했다. 민족민주동맹은 시위의 필요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시위를 이용해 총선을 치르라고 압박하려 했지 급진적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운동의 얼굴로 급부상하면서, 수치는 운동을 투쟁 국면에서 화해 국면으로 돌리려 애썼다.

8월 말 대규모 시위에서 수치는 참가자들에게 “군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말라”고 호소했고 민주주의 요구는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치의 등장은 정권이 재정비하고 수치 자신을 포함한 운동을 분쇄할 시간을 벌어줬을 뿐이다.

운동의 약점을 감지한 군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으로 수치에게 보복했다. 군 부대가 양곤으로 돌아와 마주

치는 자라면 누구든 죽였다.

군대는 비무장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했고, 시위 지도자들을 산 채로 불태우는 잔혹 행위도 저질렀다.

수치를 비롯해 탈출한 활동가 중 다수는 이후 감옥에 갇히거나 가택 연금됐다.

노동자 운동은 잠시 주도권을 잡았지만, 이제 그런 때는 지나갔다.

이후 몇 년 동안 정권은 자신을 민주적이라고 포장하려 했다. 제한적인 선거가 열렸고, 대개 적대적이었던 국제여론을 돌릴 목적에서 특정 개혁 조처들이 허용됐다.

2007년 유가 상승 때문에 소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학생들은 이에 열정적으로 호응했다.

군사 정권 깡패들이 행진하는 시위대에 발포하자, 불교 승려들이 운동에 참가했다. 곧 유가 인상 규탄 시위가 확산됐고, 또다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승려들은 부활한 운동의 선두에 섰고 대중 운동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승려들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사악한 군부가 폭정을 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군사 정권은 승려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민중을 궁핍으로 내몰고 있다. 군사 정권은 모든

시민들의 공동의 적이다.”

이번에는 아웅산 수치와 민족민주동맹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지난번 운동 때보다] 훨씬 굳건했고, 노동자 행동은 훨씬 제한적이었다.

군부가 곧 민주 정부에 자리를 내주리라는 기대가 만연했다.

그러나 부활한 운동은 또다시 군경의 탄압을 받았고 곧 사그라들었다.

미국이 미얀마 정치에 개입한 것은 운동의 불씨를 꺼뜨리는 데에 일조했다.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미얀마를 미국의 핵심 경제적 경쟁국인 중국에 맞선 동맹으로 삼는 것이 전략적으로 커다란 득이 되리라 여겼다.

군사 정권은 민족민주동맹과 몇 년에 걸쳐 타협안을 협상했다.

이 때문에 수치가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고, 군부가 상당한 의석을 보장받는 총선이 치러졌다.

이 합의는 자유주의 지식인 계층에게도 흡족한 것이었다.

이후 치러진 2015년 총선에서 민족민주동맹은 압승했고 수치가 국가 수반이 됐다. 수치는 재빨리 군부와 화해했다.

계급

새 정부와 군부는 경제 문제에 관해 여전히 살아 있는 계급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버마 민족주의 물결을 이용했다.

새 정부는 몇몇 집단들이 미얀마에 “제후시민”*일 뿐이라고 규정하는 인종차별적 법률을 되살렸다(이 법은 영국의 식민 통치 시절 제정되고 이후 군정이 이용했던 것이다). 더 심하게 악마화된 집단도 있었다. 특히 라킨주(州) 출신의 로힝야 무슬림들이 수치 정부의 표적이 됐다.

군대가 날뛰며 로힝야족을 그들의 거주 지역에서 공격했고, 나중에는 [로힝야족] 반정부 무장 저항 세력을 분쇄하려 했다.

그 후 인종 청소가 이어졌다. 군대는 강간과 살인을 저질렀고, [로힝야족의] 주택에 불을 질렀다.

로힝야족 수십만 명이 미얀마와 이웃한 방글라데시로 쫓겨났고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군부가 수치 정부를 끌어내린 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군부는 자신들의 통제력에 수치가 가한 온건한 위협조차도 참을 수 없었던 듯하다.

군 장성들은 수치의 민족민주동맹이 더 급진적 민주주의 운동에 기회가 돼 마침내 운동이 군부의 실권을 빼앗을까 두려워했다.

지난 30년의 교훈은, 군부를 타도할 힘은 노동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아웅산 수치와 그 부하들이 절대 상상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는 민주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2호 번역 강미영

🔍 용어설명

미얀마의 인종차별적 시민권

미얀마 시민권법은 시민 등급을 시민, 제후시민, 귀화시민으로 구분한다. 시민권에 따라 차별이 있고 여러 소수민족들이 온전한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거나 아예 박탈돼 있다.

서울시장 선거 성소수자 쟁점화 기회주의 박영선, 혐오 조장 나경원·안철수

성지현

성소수자 쟁점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떠올랐다. 성소수자 자금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허가 문제가 각 정당과 후보 간 쟁점이 됐다.

퀴어퍼레이드는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매해 개최돼 온 성소수자들의 행사다. 50여 명 행사로 시작한 이 행진은 이제 5만여 명이 모이는 행사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5년부터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한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됐다. 그 과정에서 퀴어퍼레이드도 미국 대사관을 초대하고 기업 후원을 받는 등 더 주류화해 왔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돼 왔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인식의 개선으로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다. 인식 개선조차도 불균등하고 여전히 편견도 많다. 때문에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일상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성소수자들이 도심에 모여서 함께 행진하면서 연대감을 느끼고 자신을 긍정하는 날은 의미가 크다.

개신교 우파 등은 우파 세력을 결집하는 쟁점으로 성소수자 문제를 삼아 왔다. 직접 겨냥해 온갖 편견을 유포해 왔고, 행진을 직접 방해하기도 했으며, 서울광장 사용 허가 문제를 놓고 박원순도 비난해 왔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난처해 이 쟁점에 침묵·회피하거나 과거 박영선처럼 혐오에 동조하면 진보 염원 대중의 일부를 실망과 사기저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회운동이 이런 민주당을 단호하게 비판하지 않고, 협조를 기대해 왔다. 도심 행사를 허가한 박원순 시장도 우파들이 공격할 때 단호하게 방어하지는 않았다.

지금 보수 우파 야권의 유력 후보들인 안철수와 나경원이 퀴어퍼레이드 장소를 도심 외곽으로 밀어내려는

언사를 하는 것도 이런 일환인 듯하다.

보수 야권 단일 후보를 노리는 안철수가 먼저 TV 토론회에서 퀴어퍼레이드를 “거부할 권리” 운운하며 “도심 밖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나경원도 ‘동성에 반대’와 퀴어퍼레이드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했다.

골장 <기독교일보>는 사실에서 “[안철수의] 소신을 새롭게 평가”한다며 화답했다.

그런데 안철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아주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여 온 바 있다. 2012년에는 찬성했다가, 2017년 대선 후보일 때는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를 얘기하며 입장을 유보했다. 그런데 당시 안철수 선거캠프에서 안철수를 대신해 개신교계 행사에 참가한 인물은 “동성애·동성혼 절대 반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좌우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한 것이다.

여하튼 서울시장처럼 강력한 행정력을 가진 정치인이 성소수자들의 행진에 대고 “거부할 권리” 운운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실질적 압박이 될 수 있다. 퀴어퍼레이드의 기원이 되는 미국 스톤월 항쟁 당시 구호가 “벽장에서 나와 거리로”였는데, 성소수자들에게는 다시 ‘벽장’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들릴 것이다.

민주당 후보들의 침묵과 회피

한편, 민주당 안에서도 중도층 지지 확보에 감정이 있다고 여겨지는 박영선은 성소수자들과 진보층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싶은 듯하다.

2월 12일 클럽하우스(음성 채팅 앱)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박영선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인식 변화가 있었고, 저도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5년 전에는 보수 개신교 행사에 참가해서 “동성애법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게 하는 법”이라며 우파에게 야점을 떨었다.

그러나 박영선의 발언이 개과천신을 뜻하는 건 아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말은 끝내 꺼렸다. 과거

혐오 발언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거나 반성한 것도 아니다. 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개최 찬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것을 확실히 했다가는 중도 보수쪽 표를 안철수나 나경원에 게 잃는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번 박영선의 발언은 성소수자에 대한 민주당 주류 입장에 발맞춘 정도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자신이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 “동성애 반대[하지만] ...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박영선의 “차별 반대” “인권” 운운 역시 진보층의 반발을 줄여보려는 공허한 선거용 제스처일 뿐이다.

이런 궤변은 대놓고 혐오·차별하지 않지만 성소수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의지도 별로 없다는 뜻이다.

문재인을 포함해서 주요 여권 인사들은 “차별에 반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부해 왔다. 오히려 차별 현안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요구를 외면했다. 군형법92조의6(군대내 동성애 처벌법) 존속, 차별금지법 요구 외면,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등이 차별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다. 낙제점인 것이다.

경선 대상인 우상호도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박원순 개혁은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웠는데, 고작 그 정도도 잊겠다고 못하면서 박원순 계승 운운하니 더 가소로울 따름이다.

이런 우파의 혐오 조장과 민주당의 회피·침묵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반발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등도 비판 입장을 발표했다.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우파 후보는 물론, 왼쪽에서도 표를 얻으려고 우파와 다른 듯하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회피하고 우파 눈치를 보는 박영선도 차별받는 사람들의 대안이 아니다.

퀴어퍼레이드가 만만치 않게 세를 유지하며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고, 성소수자 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이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기층에서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을 성장시키도록 애써야 한다.



사진 출처: David Watson

대중 파업이 군부를 뒤흔들 수 있다

2월 22일 미얀마(버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벌어져 미얀마 대부분이 완전히 멈췄다. 군부의 통치에 맞서 위력을 보여 준 것이다.

거리 시위 참가자가 이제까지 가장 많았고 상업 도시 양곤 바깥의 수많은 크고 작은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 활동가들은 말했다.

미얀마 전역에서 대열이 끝없이 이어진 시위대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다. 붉은 현수막과 안전모의 바다였다.

노동자 대표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노동자 파업은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계급 사람들을 저항에 끌어들었다. 상업점과 사무실이 하루 동안 문을 닫았고, 거리에 있는 몇 안 되는 차량들이 시위에 열렬히 지지를 표했다.

저항의 규모는 2월 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를 확실히 떨게 할 것이다. 하지만 군 장성들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난 주말 군부는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 부대를 파견해 시위를 혹독하게 진압했다. 저격수들이 거리 시위 참가자들에게 살탄을 쏘준 사격해 2명이 죽고 30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 한 명은 16세 소년이었다. 이 소년을 살해한 자의 얼굴을 인쇄한 코팅 포스터가 길바닥에 나뒀었다. 포스터에는 이런 구호가 적혀 있었다. “피에 굶주린 범죄자가 민간인을 저격용 총으로 살해했다. 반인륜적 범죄를 절대, 절대 잊지 말자.”

행진하는 시위대는 포스터에 인쇄된 군인의 머리를 발뼘꿈치로 짓밟았다. 음악가들은 행진에 맞춰 인기 있는 투쟁가 “쓰웨이 땃싸”(피의 결의)를 연주했다.

군경이 이보다 훨씬 유혈 남자한 폭

력을 저지를 수 있음을 모두가 안다. 사람들은 1988년과 2007년의 대학살을 결코 잊지 않았다.

양곤에서 시위 진압 경찰은 핵심 시위 장소 두 곳을 표적 공격했다. 경찰은 대열을 지어 시위대에게 달려들어, 곤봉으로 방패를 두들기며 합성을 질렀다. 이런 위협이 통했는지 시위 참가자 대부분이 재빨리 흩어졌다.

유혈남자

양곤 다른 곳에서는 경찰 저지선 앞에서 수천 명이 연좌시위를 벌였다. 유니버시티가(街)와 잉야로(路)가 교차하는 이곳에는 근처에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치가 있다.

하지만 오후에 시위 조직자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제 해산합니다. 우리는 폭력을 원치 않습니다.”

시위대가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운동이 위협에 맞설 방법을 찾지 못하면 정권은 권력을 부지할지도 모른다. 파업을 지속하고 방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사활적인 첫 단계다.

운동에 또 다른 위험도 있다. 거리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유엔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강대국들이 미얀마에 신경을 쓰는 것은 오로지 미얀마의 석유와 천연가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미얀마의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민주주의 투쟁을 위한 정직한 중개인 구실을 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3호 번역 김준호



2019년 6월 서울 퀴어퍼레이드

사진 출처: 김지현



택배 과로사 대책 합의 한 달

인력 충원은 생색내기 수준, 해고 자행하는 택배사들

신정환

택배 과로사 대책이 합의된 지 한 달이 돼 가지만, 약속한 분류 인력 투입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채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까지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변한 것이 없다”며 불만과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최근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표적 삼은 부당 해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한진택배 노동자들(280여명)과 CJ대한통운본부 창녕지회 조합원들은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2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한진택배는 김천대리점을 2월 1일부터 2개로 분구했는데, 고용 승계 면담에 노조원들이 개별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입 대리점장이 이를 만에 조합원 4명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고용과 처우에 대한 협상을 개별 면담이 아니라 노조와 할 것을 요구했었다.

한진택배 사측과 대리점주들은 새로운 계약 체결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

김천 지역 한진택배 노동자들은 노조(지회)를 결성하고 열악한 작업장 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화장실 추가 설치와 휴게실 마련, 약속한 분류 인력 투입 등 “인간적인 대접을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들”이다. 김천 지역 한진택배 노동자 23명 중 5명이 여성인데 남녀 화장실이 분리돼 있지 않고, 혹한 속에 작업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도 없었다. 하루 대어섯 시간에 이르는 무료 노동인 분류 작업으로 노동자



사용자들의 반격에 맞서 다시 투쟁에 나선 택배 노동자들 2월 23일 경기도 한진 광주터미널에서 열린 택배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들은 14~15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대리점은 권한이 없다며 묵묵부답이었고, 고용에서 처우까지 노동자들의 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사장인 한진택배 본사는 위탁계약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 왔다. 본사 측은 이번 해고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다. 그러나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대리점 분구나 통합, 폐지 등은 본사에서 결정하는데, 이때 종종 조합원들과는 계약을 맺지 않는 방식으로 노조

를 탄압해 왔다. 특히 노조가 새롭게 조직되는 대리점들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롯데택배 울산 신정대리점이 폐지되면서 조합원 전원이 해고됐다가 투쟁을 통해 복직된 바 있다. 한진택배의 경우 최근 김천대리점 뿐 아니라 올해 노조원들이 생긴 원주에서도 대리점 분구가 추진되면서 해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장은 노조 준비 시기부터 1년 넘게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문자메시지로 갖은 욕설과 함께 해고 위협을 일

삼다가 최근 계약이 만료되자 조합원 2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처럼 사측은 택배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택배 현장 ‘불공정 관행 특별 제보 기간’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 계약 해지”, “노조 가입자에 탈퇴 종용·계약 갱신 거절” 등이 있다. 택배사들이 위탁계약을 통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진짜 사장인 택배사들이 책임져야

노동자들은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오는 7월 25일부터 택배기사의 고용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된다. 또한 1월 21일에 체결한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에도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합의 내용을 무시하며 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를 일삼고 있다. 정부는 1월 대책 발표 당시 “불공정 사례”들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접수된 제보에 대해 사업주가 처벌 받았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택배사들이 해고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번 해고 사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저항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해고가 관철되면 이제 막 노조가 결성되거나 조직력이 취약한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조건 개선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어 놓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야금야금 확대하려 할 것이다.

2월 23일 파업에 돌입한 후 경기도 광주 한진택배터미널에 모인 노동자들은 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3일 창녕지회 파업을 시작으로, 25일에는 영남권 전역, 27일부터는 전제 조합원 파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흡한 인력 충원에 커지는 노동자들의 불만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과로사 대책 후에도 “현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해고 사태에서 보듯 일방적 계약 해지뿐 아니라, 분류 인력 투입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 택배사들로부터 2월 4일까지 분류 인력 6000명 총원(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각 1000명)을 재차 약속 받았다. 그러나 택배사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를 대며 노조원들이 다수인 일부 택배터미널 중심으로만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각각 200명만 우선 투입하고 다른 곳들은

[택배기사들에게] 분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그대로예요. 수수료도 얼마나 지급할지 알 수가 없어요.”

“회사가 또 ‘설 명절만 넘기자’며 앞에서 쇼만 하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 충원 비용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대리점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인건비의 절반을 대리점이 내라고 하거나, 대리점에 낮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알아서 인력을 뽑으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일은 고되면서 단시간·저임금 일자리인 분류 작업에 안정적으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인력 충원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2월 23일 한진 광주터미널 택배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그러나 최근 MBC 보도를 보면, 택배

사들은 정부의 현장 점검 정보를 미리 입수해 당일에만 보여 주기식 점검을 받고 있었다.

택배사들은 택배 요금을 인상해 그 돈으로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속셈이다. 비용을 택배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현재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적정 택배 요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데, 택배사들은 요금 인상을 요구할 뿐 아니라 요금 인상분을 어떻게 쓸지는 자신들의 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택배사와 정부가 약속 이행을 미루는 사이,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목표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또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택배사

들은 약속한 인원을 즉각 충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과로로 쥐어 짜며 이윤을 얻어 온 택배사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미국 텍사스 최악의 한파: 기후 혼돈이 야기할 공포를 흘깃 보여주다